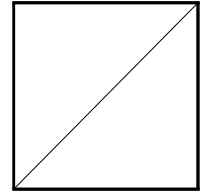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2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9. 29. (제 17 차)	

(주)우리카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연월일	2021. 9. 29.

1. 의결주문

(주)우리카드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주)우리카드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주)우리카드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2021.7.8.) 심의필
- 제17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1.9.17.) 심의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관련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토록 함

<별지>

(주)우리카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우리카드 : 과태료 5억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 (주)우리카드는 2013.9.23.~2019.10.31. 기간 중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일부 회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17,531건, 232백만원)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제1항, 제2항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

관 계 법 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 13. (생략)

② ~ ④ (생략)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9.30. 시행 이전의 것)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4의3.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 13. (생략)

② ~ ④ (생략)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다른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 아. (생략)		
자. 법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제72조제1항제4호의2	5,000만원
차.~고. (생략)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9.30. 시행 이전의 것)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 아. (생략)		
자. 법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제72조제1항제4호의3	500만원
차. ~ 고. (생략)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 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現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개정 후)】

1. ~ 2.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 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감경 사유

(1) ~ (4) (생략)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 (9) (생략)

5. ~ 6. (생략)

<별표 3> 【舊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개정 전)】

1. ~ 2.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개정 2013.12.20>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 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하며, 나.(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감경 사유

(1) ~ (4) (생략)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 (9) (생략)

5. ~ 6.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여신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92	02-3145-8801